

임 직 원 소 송 지 원 규 정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지원대상	-2
제3조의2 지원대상의 확대	-2
제3조의3 적극행정 기준	-2
제4조 소송비용 지원시기	-2
제5조 변호사 선임	-2
제2장 민사소송	-3
제6조 소송비용 지원	-3
제7조 소송비용의 정산	-3
제3장 형사소송	-3
제8조 소송비용 지원	-3
제9조 소송비용의 정산	-3
제4장 지원절차	-3
제10조 지원신청	-4
제11조 지원결정	-4
제12조 사실확인 등	-4
5장 소송지원위원회	-4
제13조 설치	-4
제14조 구성	-4
제15조 심의·의결사항	-5
제16조 회의	-5

제17조 의결내용의 보고	-5
제6장 기 타	-5
제18조 서약서 징구 및 채권보전	-5
제19조 위임사항	-5
부 칙	-6

임직원소송지원규정

2017.5.19.제정(규정제1137호)
2017.12.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제1160호)
2019.11.7.개정(규정제1249호)
2023.5.10.개정(규정제1425호)
2024.12.31.개정(규정제14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으로 수사개시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임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능동적 업무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7., 2023.05.1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7., 2023.05.10.>

1. “임직원”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규정에서 정한 임원 및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2. “업무수행”이란 공단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피소 임직원”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 포함)을 당한 임직원으로서 퇴임(퇴직)한 자를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당연 퇴직된 임원 또는 제9조의2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
 - 나.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또는 징계 면직된 임직원
4. “소송비용”이란 피소사건 발생 후 최종 판결확정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 가. 변호사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법률상담, 문서 작성, 변호인 동행 등에 따른 비용 등)
 -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관련 법규에서 인정하는 비용
5. “주관부서의 장”이란 「직제시행세칙」에 따라 소송업무를 총괄 하는 부서(팀)의 장을 말한다.
6. “소관부서”란 「직제시행세칙」에 따라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송지원”이란 피소 임직원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공단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추천 등 법률적 지원을 말한다.

8. “적극행정”이란 공단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3.05.10.>

제3조(지원대상) 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피소 임직원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5.10.>

1.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형사소송 결과,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또는 자격정지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공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공단의 이미지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지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제3조의2(지원대상의 확대) ① 피소 임직원이 제2조제8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다.

② 피소 임직원이 감사 부서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조의3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피소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3.05.10.]

제3조의3(적극행정 기준) 이 규정에서 인정되는 적극행정 기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05.10.]

제4조(소송비용 지원시기) ① 소송비용은 피소 임직원이 우선 부담하고 최종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소 임직원이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소송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판결 확정 전에 소송비용을 선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우선 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피소된 경우

제5조(변호사 선임) ① 소송대리인은 피소 임직원이 직접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임료의 과다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소 임직원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공단 고문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신설 2023.05.10.>

제2장 민사소송

제6조(소송비용 지원) ① 민사소송 비용지원은 피소 임직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되, 변호사 비용은 각 심급별로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공단은 소송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피소 임직원이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이행해야 할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피소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소송비용의 정산) ① 피소 임직원이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급 받은 후 최종 판결에서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일부 패소 포함)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원한 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②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피소 임직원이 최종 판결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모든 소송비용을 공단에 귀속시킨다.

제3장 형사소송

제8조(소송비용 지원) 형사소송 비용지원은 피소 임직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하되, 변호사 비용은 각 심급별(형사입건 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인정)로 3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최종 판결 확정까지 총 한도는 6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다만, 피소 임직원이 심급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7.>

제9조(소송비용의 정산) 피소 임직원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급 받은 경우에는 최종 판결확정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11.7., 2023.05.10.>

1.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환하지 않음
2. 형사소송 결과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또는 자격정지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공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금액 전액상환

제4장 지원절차

제10조(지원신청) ① 피소 임직원이 소송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소 직원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지원신청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소송지원신청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05.10.>

② 퇴직한 임직원이 피소된 경우에는 소송지원신청서를 직접 소송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0.>

제11조(지원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원한다. <개정 2023.05.10.>

② 지원요청 사항이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추천 등 법률지원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3.05.10.>

제12조(사실확인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피소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05.10.>

②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피소 임직원에게 대한 추가적인 인사상 또는 대·내외 감사조치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및 중과실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5.10.>

제5장 소송지원위원회

제13조(설치) 피소 임직원에게 대한 지원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송업무 주관부서의 소관 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및 회의내용의 기록·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송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노동조합원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한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한다. <개정 2023.05.10.>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송지원의 적정여부(업무수행 관련성 판단 등)
2. 소송비용 등 선지급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
4. 지원중인 사건에 대한 지원의 중단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소 임직원 또는 사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지원의결서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개정 2023.05.10.>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제17조(의결내용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0.>

제6장 기 타

제18조(서약서 징구 및 채권보전) ① 피소 임직원이 소송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준수사항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0.>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 지급할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2023.05.10.>

1.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2. 금융기관 예·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
3. 본인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4.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제2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단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5.10.>

제19조 (위임사항)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소송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05.10.>

부 칙 <규정 제1137호, 2017.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단체협약에 의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규정관리규정) <규정 제1160호, 2017.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1249호, 2019.1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425호, 2023.0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접수된 소송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민·형사 사건으로 수사개시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소송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495호, 2024.12.31.>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임직원소송지원규정 [별지 제1호서식](제10조 관련) <개정 2023.05.10.>

소송지원신청서

신청인	부서명	
	직 급 (직위)	성명 (연락처)
사 건 상 세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개시일	사건종료일
	원고(성명)	원고(주소)

사건 개요:

신청인 의견:

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장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장

(서명 또는 인)

소송지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공)소장(또는 입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사건 결과(검찰·경찰 통지서, 판결문 등)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 4. 각종 비용증빙 서류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요청 등 법률지원 사항은 소송지원신청서 제출 생략 ※주의: 각종 자료 제출 시 신청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

■ 임직원소송지원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16조 관련) <개정 2023.05.10.>

소 송 지 원 의 결 서

1.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 급 (직 위)		생년월일	

2. 주 문

3. 개요 등 사실 기록

4. 의결사항

「임직원소송지원규정」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하고 서명함.

년 월 일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